

# “국민 법감정 못미치는 판결...내란죄 사면불허법 시급하다”

## 윤석열 1심 재판 광주시민 반응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광주 시민들은 “기나긴 내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환영하면서도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특히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짓밟혔던 약물을 떠올렸던 광주 시민들은 “재판부가 법정 최고형으로 강력하게 단죄했어야 하는데 한참 부족한 판결”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동시에 전두환씨의 사례와 달리, 이번에는 사면 없는 엄벌이 이뤄져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재판부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나머지 내란 공범들의 양형 과정에서 반영한 이해할 수 없는 감경 사유에 대해서는 공분했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이날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피해자들은 40년 넘게 갖고 있던 그 날의 악몽이 되살아나 고통을 겪었다. 지금도 군복만 봐도 잠잠 못하는 지경인데, 비상계엄이 터지자 ‘어디로 피난을 가야 하나’는 질문이 쇄도할 정도였다”며 “5·18 피해자들을 두 번 죽인 자본인들에게, 국민을 향한 국가 폭력을 저지른 이들에게 감히 꿈도 못 꿀 정도로 단죄해야 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전혀 이후 쿠데타가 성공하면 수십 년 동안 평명거리고 대를 물려 호의호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 것 아니냐”며 “최소한 정권이 바뀌더라도 사면으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쿠데타를 실패하더라도 사면을 기대하는 인식이 남으면 또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시민들은 계엄 이후 일상 전반에 걸친 불안과 트라우마 등 계엄으로 인해 잃어버린 것이 많았는데, 뒤늦게나마 종지부를 찍은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대웅(65·광주시 남구)씨는 “계엄 이후 자영업

5·18 경험한 광주 특별한 심정

국민에 충겨는 위정자에  
법정 최고형 선고 안 돼 아쉬움  
내란 공범들 감형에도 공분  
전두환처럼 사면 뎀 치욕 역사 반복

자들은 경기침체를 피부로 느꼈을 것”이라며 “고등학생 때 전두환의 계엄을 겪은 사람으로서 5·18의 트라우마를 다시 겪는 기분이었다”고 밝혔다.

김씨는 “내란죄에 대해서는 사면을 불허하는 법안이 처리돼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한다”며 “내란 동조자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내란에 깊게 개입된 주요 동조자들은 발본색원해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명준(49·남구 주월동)씨도 “자영업을 하고 있는데, 계엄이 터진 직후부터 경기가 전례 없이 침체돼 당장 하루 먹고 살기도 팍팍해졌다”며 “지금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계엄 당시보다야 낫지만, 언제까지 경기 침체가 이어질지 가능성도 못한다”고 토로했다.

“사면 없는 엄벌”을 촉구하는 광주 시민들도 다수였다. 과거 전두환 때처럼 정치적 사면이 이뤄진다면 내란과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정근(57·남구)씨는 “계엄 때부터 잠을 못 이루고 뉴스를 틀어놓고 산다”며 “상식적으로만 생각해도 본인의 안위와 권력을 위해 국가 존립과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사면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 선고가 내란 관련자들을 찾아내고 엄벌하는 시작점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위현(여·25·광산구 운수동)씨는 “윤 대통령이 전처처럼 어설픈 특별사면으로 다시 풀려나지 않



우원식 국회의장 “尹 판결 아쉽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고 있다.

아야한다. 이번 심판이 역사의 교훈으로 남아야 한다”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사과하거나 반성하지 않았으며 아직도 자신이 잘못된 점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에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국민에

게 충을 겨는 위정자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 내려지는 것이 마땅했다”며 “내란 이후 우리는 비교적 성숙해졌다고 믿어온 정치문화 속에서 여전히 총칼을 이용해 노골적으로 권력을 쟁취하려는 세력이 상존한다는 크나 큰 과제를 확인했다. 내란 세력에 대한 영구적 사회 단절이 우리 민주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혐오와 대립의 정치를 멈추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규복 광주전남춌꽃불행동 공동대표는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가담·동조자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며 “내란죄에 대해서는 결코 사면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다시는 내란 시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윤준명 기자 yoon@kwangju.co.kr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전두환 1심 ‘사형’ ... 윤석열은 ‘무기’

내란 재판, ‘계엄 자체가 폭동’ 판단 같지만 판결은 달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996년 ‘12·12, 5·18’ 사건 1심에서 전두환에게 사형이 선고된 전례에 견줘, 같은 내란 범주 사건에서 법정 최고형(사형)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및 작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유죄로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를 “그 자체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으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군·경의 국회 진입과 출입 통제, 국회 기능 마비 시도 등을 폭동 행위로 인정했다. 담

장 월담·헬기 투입·국회의사당 강제 침입 등 대부분 행위가 폭동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과 맥락을 공유하는 ‘전두환 재판’에서 서울지법은 1996년 8월 26일 전씨에게 사형, 노태우에게 징역 22년 6월을 선고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1996년 12월 16일 항소심에서 전두환을 무기징역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 형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전두환 사건에서 형법상 폭동을 “최광의의 폭행·협박”으로 정의하고, 비상계엄 전국확대 자체도 협박행위로서 폭동에 해당해 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폭동이 계속된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폭동에 직접적 영향력뿐 아니라 계엄 선포를 통한 권한 조정 등

“간접적 영향력 행사”까지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국헌문란 목적’ 역시 전두환 사건 대법원은 국회의사당 점거·폐쇄, 정치활동 규제 등을 통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목적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사건도 포고령의 정치활동 금지와 국회 봉쇄 시도를 목적 인정의 핵심 근거로 삼았다. 두 사건 모두 헌법이 상정한 합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본질은 동일한 것이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량 격차의 배경으로는 ‘적용 죄명’의 차이가 거론된다. 전두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내란수괴·내란목적살인 등 중대 범죄가 함께 적시돼 있고, 전씨 1심 판결에서도 광주 집안

과정의 강경진압·살해행위를 국헌문란 계획 달성의 “직접적인 수단”으로 본 판단이 등장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내란 우두머리와 작권남용 등으로 구성돼, 살인죄가 결합된 전두환 사건과는 구성 자체가 다르다는 점도 판결문 비교에서 확인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내란죄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국가 전체에 미치는 위험성이 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된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총기 발포나 대규모 사상자가 없었다 하더라도, 국민의 대의기관을 무장 병력으로 봉쇄하려 한 행위 자체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중대 범죄로 다루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결국 윤 전 대통령 사건은 항소심에서 양형(사형 선택 여부 포함)과 함께 폭동·국헌문란 목적 인정 범위가 다시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계엄 선포 자체를 폭동으로 보는 논리, 국회 기능 마비를 목적 인정의 중심에 둔 판단이 상급심에서도 유지될지가 항소심의 관련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 주요 외신 신속 보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9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되자 주요 외신들도 신속하게 관련 소식을 전했다.

AP·AFP·로이터·dpa·고도·신화 등 세계 주요 통신사들은 이날 오후 4시 2분께 선고가 나온 직후 일제히 윤 전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속보를 타전했다.

AP는 “윤 전 대통령이 야권을 탄압하기 위해 시도한 짧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AFP도 “한국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재판부는 2024년 12월의 비상계엄 선포를 국회를 ‘마비’ 시키기 위한 음모라고 규정했다”고 전했다.

미 CNN 방송도 서울발 ‘긴급 뉴스’로 선고 결과를 보도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